

주간 통일정세

2017-37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9.9	아사히 “첨단무장장비 육진처럼 소중하다”는 김정은 발언 보도(연합뉴스)
		北 신문, 정권수립일 맞아 “최첨단 주체무기 더 만들어야”(연합뉴스)
		北, 푸틴·카스트로 정권수립일 축전 보도…中은 미언급(연합뉴스)
	9.10	北 김정은 “수소탄 폭음, 위대한 승리…최후승리는 확정적”(연합뉴스)
		北 김정은, 핵무기연구소장 손잡고 팔짱끼고…‘애정·신뢰’ 과시(연합뉴스)
		北, 정권수립일 경축연회…“핵보유국 지위 더 공고해져”(연합뉴스)
평양미술종합대학 설립 70주년 맞이 기념보고회(연합뉴스)		
9.12	北 각료 “제재 때문에 환경 분야 유엔 대북사업 막혀”(연합뉴스)	
9.14	김정은, 재일교포 여성 위한 연회 마련…김영철 참석(연합뉴스)	
군사	9.9	北 “제재, 썩은 그물보다 못해…믿을 것은 핵무력뿐”(연합뉴스)
	9.10	“트럼프, 韓 전술핵배치·핵무장 등 ‘공격적’ 대북옵션 검토”(연합뉴스)
		北, 수소탄 탄두 조립·풍계리 진동 추정 영상 노출(연합뉴스)
	9.13	“北, 무기수준의 핵물질 계속 제조…시리아와 화학무기 협력”(연합뉴스)
	9.14	“北 6차 핵실험 폭발력 250kt 상향…‘수소폭탄’ 北주장 확인”(연합뉴스)
9.15	日 언론 “北, SLBM 발사관 2~3기 갖춘 신형잠수함 완성 임박”(연합뉴스)	
경제	9.14	NHK “북한, 일본 홋카이도 통과 태평양 방향 미사일 발사”(연합뉴스)
사회 문화	9.10	“北 선박 움직임 지난해보다 감소…러시아행 비율 늘어”(연합뉴스)
		“북한, 라선 특구 방문 중국인에 핵 개발 선전 강화”(연합뉴스)
		北, 정권수립일 ‘미사일 도발’ 없어…각지서 공연·무도회(연합뉴스)
		北 TV, 스마트폰으로 노동신문 보는 평양시민들 방영(연합뉴스)
외교 국방	9.9	日 언론 “北주민 사이에 핵실험 관여자 ‘귀신병·돌연사’ 소문”(연합뉴스)
		美 하원서 “北 광 위협 규탄” 초당적 결의안 발의(연합뉴스)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등록 北선박 활동 차단 주도(연합뉴스)
	9.10	멕시코서 쫓겨나는 北대사 “추방명령은 무지한 조치” 반발(연합뉴스)
		北 “핵무기 유럽타격 주장은 언어도단…프랑스부터 핵포기하라”(연합뉴스)
		北 신문, 추가제재 추진 美에 “핵 고도화, 시비 못 해”(연합뉴스)
	日 이노키 참의원, 북한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연합뉴스)	
	태평양 섬나라들, 북핵 규탄·북한 선박 등록 취소하기로(연합뉴스)	

	라오스 대통령, 김정은에 정권수립일 축전(연합뉴스)
9.11	조선신보 “트럼프 업포에도 北 내부 평온한 일상”(연합뉴스)
	北 “최후수단도 불사”...제재 주도 美에 고강도 연쇄도발 위협(연합뉴스)
	안보리 北제재안, 유류 30%에 10억 달러 상당 섬유수출 등 차단(연합뉴스)
	이란 외무부 “北 핵실험 우려...이란 연계설은 허위”(연합뉴스)
	IAEA “북핵 감시팀 구성”...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연합뉴스)
9.12	美 의회, 北핵실험 후 첫 ‘북한 청문회’ 개최(연합뉴스)
	北 제네바대사 “불법 안보리 결의 거부...美 고통 겪을 것”(연합뉴스)
	NHK “中 4대 국유은행, 외교관 포함 북한 국적자 거래 정지”(연합뉴스)
	北 인민무력상 박영식·노동당 3개 핵심기관, 제재명단에 추가(연합뉴스)
9.13	北 “제재결의 전면배격...끝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연합뉴스)
	北 신문 “한반도 긴장완화 열쇠, 미군 몰아내는 데 있어”(연합뉴스)
	“日 외무성 간부, 北 외무성 부국장에 핵·미사일 도발 항의”(연합뉴스)
	북러 밀착행보...주러 北대사 “양국 우호전통 협약화가 목표”(연합뉴스)
	EU “대북압박 강화...유엔 새 제재안 이행·추가 독자제재 마련”(연합뉴스)
	“영국·스위스, 유엔 안보리 결의 즉각 이행...제재명단 추가”(연합뉴스)
北 김정은, 쿠바에 허리케인 피해 위로(연합뉴스)	
9.14	美 국무부 “북핵 외교적 해법 포기 안 해...실패 않을 것”(연합뉴스)
	北 외무성 최강일 부국장, 스위스서 前 미 국무부당국자 접촉 포착(연합뉴스)
	美 하원의장 “미군, 다양한 대북 군사옵션 검토·보유”(연합뉴스)
	日 관방 “北미사일 日에 낙하 않도록 요격 포함해 대응할 것”(연합뉴스)
9.15	“美 하원, ‘北 금융망 접근 차단’ 대북제재법 상정 검토”(연합뉴스)
	北 신문 “美 계속 지금처럼 나가면 더 강도 높은 대응조치”(연합뉴스)
	日 관방 “北 미사일 도발 결코 용인 못 해...가장 강한 말로 규탄”(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9.10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진행	리설주	--
9.10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축하연회 진행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
9.10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기념촬영	리만건, 홍승무	-
9.12	섬 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	최태복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9. 9.

■ 아사히 “첨단무장장비 육친처럼 소중하다”는 김정은 발언 보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3월 측근에 신형 무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첨단무장장비 하나하나가 육친처럼 소중히 느껴진다”고 발언한 것으로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함.
- 아사히는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관계 소식통이 당·군 측근에게 말한 작년 3월 6일 김정은 발언록과 같은 해 4월 28일 당·정부 간부에게 배포한 책자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발언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강대한 혁명 무력과 위력 있는 주체적 국방 공업이 있기 때문”이라며 “첨단무장장비 하나하나가 육친처럼 소중히 느껴진다”고 발언했다고 전함.

2017. 9. 10.

■ 北 김정은 “수소탄 폭음, 위대한 승리…최후승리는 확정적”(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기술자를 위해 목란관에서 열린 축하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핵 과학자·기술자들을 위해 성대한 축하연회를 마련했다”면서 “연회에는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초대되었다”라고 전함.
- 김 위원장은 연회에서 핵 개발자들을 치하하면서 “이번에 올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으며, 그러면서 “튼튼한 자립적 경제토대가 있으며 비상한 두뇌를 가진 과학자 대군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 자력갱생의 투쟁전통이 있기에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9. 10.

■ **北 김정은, 핵무기연구소장 손잡고 팔짱끼고…‘애정·신뢰’ 과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10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핵실험 관계자를 위한 경축연회와 경축공연이 열렸다고 관련 영상을 공개함.
- 이 영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 핵 개발 분야의 사령탑인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자신의 왼쪽에, 실무책임자인 리홍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을 자신의 오른쪽에 세우고 목란관 연회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등장함.
- 특히 김정은은 리홍섭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꼭 잡는 등 핵 개발 과학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김 위원장은 연회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 고위간부들에게 리홍섭을 특별히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리홍섭을 소개받은 군부 서열 1위인 황병서(차수)가 상장(별 3개) 계급인 리홍섭에게 깍듯하게 경례하는 모습도 포착됨.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9. 10.

■ **北, 정권수립일 경축연회…“핵보유국 지위 더 공고해져”(연합뉴스)**

- 북한은 정권수립 69주년 기념일을 맞아 옥류관에서 9일 경축연회를 열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함.
- 신문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정·군 간부들이 연회에 참석했다고 전했으며, 또 해외교포들과 북한 주재 외교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도 초대됨.
- 연회에서 연설한 김영남은 “이번 수소탄 시험(6차 핵실험)의 대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으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주체 조선의 전략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밝힘.

■ **평양미술종합대학 설립 70주년 맞이 기념보고회(연합뉴스)**

- 평양미술종합대학 설립 70주년을 맞아 10일 기념보고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과 박춘남 문화상 등이 행사에 참석함.

2017. 9. 12.

■ **김정은, 재일교포 여성 위한 연회 마련...김영철 참석(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재일여성동맹) 결성 70돌 대표단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연회가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라고 전함.
- 이어 “연회에는 김일순 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여성동맹 결성 70돌 대표단과 공화국창건 69돌 경축 재일본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초대되었다”고 밝힘.
- 연회에는 대남사업과 해외교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등이 참석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9. 9.

■ **北 신문, 정권수립일 맞아 “최첨단 주체무기 더 만들어야”(연합뉴스)**

- 북한은 정권수립 69주년인 9일 관영매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국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며 ‘최첨단 주체무기’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융성 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을 통해 “강력한 국가 핵무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으며 가장 혁명적인 인민정권과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기에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오늘의 만리마 대진군에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힘.
- 사설은 특히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병진 노선을 받들어 우리 식의 최첨단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3·18 혁명’, ‘7·4 혁명’, ‘7·28’의 기적적 승리와 같은 대사변들을 연이어 안아와야 한다”고 독려함.

■ **北, 푸틴·카스트로 정권수립일 축전 보도...중은 미언급(연합뉴스)**

- 북한 정권수립 69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9일 보도함.
- 푸틴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의 축전은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나란히 게재됐으며, 카스트로 의장의 축전이 더 위에 배치됨.
-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 인사들이

정권수립일 축전을 보냈는지는 이날 오전 현재까지 언급하지 않음.

2017. 9. 10.

■ 北 각료 “제재 때문에 환경 분야 유엔 대북사업 막혀”(연합뉴스)

- 태국에서 열린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국토환경보호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환경 분야의 협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선 대표단 단장인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이 태국에서 진행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급(장관급) 회의에서 7일 연설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 통신이 언급한 회의는 지난 5~8일 방콕에서 열린 ‘환경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장관급 서밋’(Asia-Pacific Ministerial Summit on the Environment)을 말함.
- 통신에 따르면 김경준 환경보호상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대북) 제재 결의들은 조선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엄중히 침해할 뿐 아니라 환경 분야의 국제적 협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조선에서 유엔환경계획과 유엔공업개발기구의 협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비난함.

2017. 9. 14.

■ 北 “제재, 썩은 그물보다 못해…믿을 것은 핵무력뿐”(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4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소용없을 것이라며 믿을 것은 자위적 핵무력이라고 주장함.
-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에 대해 ‘국가테러 범죄’라며 “이 소식에 접한 공화국의 천만 군민은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증오로 심장을 끓이며 전국적, 전 인민적 반미 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밝힘.
- 그러면서 “썩은 그물보다도 못한 제재가 무서워 주춤하거나 할 바를 못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라며 “극악한 제재 결의 조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을 것은 오직 자기 손에 들어온 자위적 핵무력뿐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병진의 한길로만 나아가려는 불변 의지를 더욱 억척같이 버리게 하고 있다”고 강조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9. 10.

■ 北, 수소탄 탄두 조립 풍계리 진동 추정 영상 노출(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공개한 6차 핵실험에 참가한 핵 과학자·기술자들을 위한 축하공연 동영상에는 수소탄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과학자들이 조립하는 영상이 무대 배경에 등장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나타남.
- 이 영상을 확인한 결과 축하공연 무대 배경 화면에 핵탄두가 폭발하는 모습의 영상에 이어 방호복을 입은 북한 기술자가 핵탄두로 추정되는 물체를 조립하는 모습의 영상이 등장했으며, 잇따라 무대 배경에는 3명의 핵무기 개발자들이 ‘수소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핵탄두 모양의 물체 옆에서 계기판으로 보이는 장치를 들여다보는 모습의 영상도 공개됐는데, 영상에 나온 핵탄두 추정 물체는 장구나 땅콩을 연상시키는 모양으로, 지난 3일 북한 공식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지지도 사진 속 핵탄두 추정 물체와 외형이 같음.
- 북한이 이날 공개한 축하공연 영상에서는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공연 무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모습에 이어 무대 배경에는 산이 흔들리는 모습의 영상도 등장했지만, 해당 영상은 6차 핵실험 당시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만탑산 진동을 촬영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확인은 되지 않고 있음.

■ “北, 무기수준의 핵물질 계속 제조…시리아와 화학무기 협력”(연합뉴스)

- 북한이 금지된 핵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시리아와 화학무기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 보고서가 공개됐으며, 8명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은 9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고 AP 통신이 보도함.
- 이들은 111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무기 수준의 핵분열성 물질 제조와 같은 금지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힘.
-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이 시리아에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존재’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특히 북한과 시리아가 금지된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임.

2017. 9. 13.

■ **“北 6차 핵실험 폭발력 250kt 상향…‘수소폭탄’ 北 주장 확인”(연합뉴스)**

- 지난 3일 실시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른 지진 규모 추정치들이 잇따라 상향 조정됨으로써 폭발력 추정치 역시 열추 250kt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수소폭탄”을 터뜨렸다는 북한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임.
- 6차 핵실험의 폭발력 250kt은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 연구원들이 지난 3월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만탐산 북쪽 갭도 입구의 수평굴 굴착 작업에 대한 위성사진과 거대한 암반구조 등을 분석, 이 굴의 제어·지탱 가능한 폭발력을 최대 282kt이라고 계산한 것에 매우 가까운 값임.
- 38노스는 풍계리 만탐산 지하에서 실시된 제6차 핵실험의 강력한 폭발력으로 인해 만탐산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매우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지표에까지 이르는 “상당한 균열(cracking)”과 “회복할 수 없는 변형(strain)”이 생겼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함.

2017. 9. 14.

■ **日 언론 “北, SLBM 발사관 2~3기 갖춘 신형잠수함 완성 임박”(연합뉴스)**

-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관 2~3기를 갖추고 장시간 잠행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을 진행, 건조작업이 80%에 달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함.
- 도쿄신문은 북한의 국방부문 관계자의 정보라며, 이 잠수함에 현재까지 발사된 적이 없는 신형 SLBM ‘북극성-3’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신문은 신형 잠수함 건조가 완료되면 발사 직후 탐지가 어려운 SLBM의 실전배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돼 핵 위협이 한층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고 관측함.

2017. 9. 15.

■ **NHK “북한, 일본 홋카이도 통과 태평양 방향 미사일 발사”(연합뉴스)**

- NHK는 15일 새벽 오전 6시 55분께 북한이 일본 도호쿠(東北)지방 방향으로

-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NHK는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을 통해 이같이 정보가 통보됐다고 전한 뒤 대상지역은 홋카이도(北海道), 아오모리(青森), 이바라키(茨城)현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전함.
-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를 통과해 태평양 쪽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짐.

나. 한국 및 미국

2017. 9. 9.

- **“트럼프, 韓 전술핵배치·핵무장 등 ‘공격적’ 대북옵션 검토”(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옵션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한국·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함.
 - NBC는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공격과 정찰강화를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옵션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함.
 - 한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힘.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9. 14.

- **“北 선박 움직임 지난해보다 감소…러시아행 비율 늘어”(연합뉴스)**
 -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최근 많이 감소하고, 러시아로의 운항이 중국으로의

운항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인용,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해당 위원회의 무작위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이 17척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척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고 VOA는 지적함.
- 북한 선박이 안전검사를 받은 항구는 지난해 8월의 경우 중국이 22곳, 러시아가 11곳이었지만 올해 8월은 러시아가 10곳, 중국 7곳이었다고 VOA는 덧붙였다.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9. 10.

■ “북한, 라선 특구 방문 중국인에 핵 개발 선전 강화”(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라선 경제특구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핵 개발 선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중국측에 핵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함.
- 신문은 중국 지린(吉林)성 여행업 관계자를 인용해 라선에서는 핵실험 후 관광버스가 다니는 도로변에 ‘전 세계를 전복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핵 우뢰(우레)다. 우리를 멈출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다’는 슬로건이 게시되었으며, 호텔에서도

핵실험 선전 영상이 상영됐다고 전함.

- 한 관광지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군인들의 대표 100여명이 모여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고 이들은 다음 장소로 먼저 이동해 같은 축하 행사를 벌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여행사의 한 가이드도 관광지 소개보다 핵무기 과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함.

■ 北, 정권수립일 ‘미사일 도발’ 없어…각지서 공연·무도회(연합뉴스)

- 북한은 정권수립 69주년인 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없이 내부 기념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군 장병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 헌화했다고 보도했는데, 모란봉극장, 평양대극장, 국립연극극장, 평양체육관광장 등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 각지에서 경축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청년·학생들과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원들도 무도회로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전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대성산혁명열사릉, 신미리아국열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등 열사 능묘에 화환을 보내 분위기를 띄웠으며, 북한의 관영·선전 매체도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수소탄 실험 성공’ 등 체제 선전 띄우기에 주력함.

■ 北 TV, 스마트폰으로 노동신문 보는 평양시민들 방영(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실화, 총대와 청춘 그리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지하철 전동차를 탄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방영했는데, 영상을 보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통해 노동신문의 기사를 엄지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읽고 있음.
- 이 남성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노동신문 목록에는 기사제목과 해당 기사가 몇 면에 배치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김일성·김정일 등의 지도자 이름은 굵은 글씨체로 진하게 표시된 점도 눈에 띈.
- 특히 중앙TV는 승객으로 꽉 찬 전동차 안에서 남녀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서 있는 장면도 보여줬는데, 이는 평양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임.

■ 日 언론 “北주민 사이에 핵실험 관여자 ‘귀신병·돌연사’ 소문”(연합뉴스)

- 북한 주민 사이에 지난 3일 핵실험 이후 핵실험 관여자 돌연사한다는 등의 유언

- 비어가 나뉜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함.
-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핵실험에 관여하면 원인 불명의 귀신병에 걸린다,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소문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 소식통은 “북한측이 핵실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난 3일 핵실험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해 사람들이 동요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9. 9.

■ 美 하원서 ‘北 광 위협 규탄’ 초당적 결의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의회 하원에서 북한의 ‘광 포위사격’ 위협을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RFA에 따르면 광이 지역구인 매들린 보델리오(민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결의안(H.RES.505)이 지난 6일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제출됨.
- 결의안은 북한의 광에 대한 위협을 규탄하고, 광·북마리아나 제도·미국령 사모아·알래스카·하와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능력에 필요한 투자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2017. 9. 10.

■ 北 신문, 추가제재 추진 美에 “핵 고도화, 시비 못 해”(연합뉴스)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핵 무력 고도화를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주체 조선의 핵 억제력 강화조치는 시빗거리로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주체 조선의 연이은 쾌승에 혼비백산, 기절초풍한 미국은 앞장에서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우리 국가의 핵 무력 고도화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위협으로

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주장함.

2017. 9. 11.

■ **조선신보 “트럼프 임포에도 北 내부 평온한 일상”(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는 평온하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국가 핵무력 강화 조치에 환호하는 조선의 민심’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임포를 놓고 있으나 국내(북한 내부)에는 평온한 일상이 흐르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인민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공장, 기업소에서의 생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평양에서는 축구를 비롯한 국제경기대회가 열리고 외국인들의 조선 관광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함.

■ **北 “최후수단도 불사”…제재 주도 美에 고강도 연쇄도발 위협(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11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고강도 연쇄 도발에 나설 것을 강하게 시사함.
-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보다 더 혹독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내는 경우 우리는 결단코 미국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위협함.
- 그러면서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준비가 다 되어있다”, “다음번 조치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거세게 몰아붙임.

2017. 9. 12.

■ **美 의회, 北핵실험 후 첫 ‘북한 청문회’ 개최(연합뉴스)**

-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미 의회 차원에서 열리는 첫 북한 청문회로,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이 주제임.

-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과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가 출석해,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과 제재 방안 등을 설명함.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로 6차 핵 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지속해서 향상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함.

■ 北 제네바대사 “불법 안보리 결의 거부…美 고통 겪을 것”(연합뉴스)

- 북한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날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결의를 주도한 미국을 위협함.
-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자 미국이 이를 되돌리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치·경제·군사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며 미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냄.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군축회의 참가국들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 대표부 군축담당 대사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뚜렷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과는 다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2017. 9. 13.

■ 北 “제재결의 전면배격…끝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자신들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힘.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결의 2375호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은 “미국의 주도 밑에 또다시 감행된 불법 무도한 제재결의 채택 높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한반도 긴장완화 열쇠, 미군 몰아내는 데 있어”(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은 철두철미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데 그 근본 열쇠가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 정세논설에서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된 근원”이라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미군이 남한에 남아있을 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면 “때문에 미국은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는 길로 나가면서 남조선의 영구 강점을 노리고 있다”고 강변함.

2017. 9. 14.

■ **美 국무부 “북핵 외교적 해법 포기 안 해…실패 않을 것”(연합뉴스)**

- 헤더 노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외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노트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는 여전히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선호하는 접근법”이라며 이같이 밝힘.
- 특히 그는 “우리는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낙관적이다. 현실적이지만 낙관적이다”라고 강조함.

■ **北 외무성 최강일 부국장, 스위스서 前 미 국무부당국자 접촉 포착(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간부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전직 당국자와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함.
- NHK는 지난 11~13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 미국 측 참석자인 에반스 리비어 전(前)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와 현장에서 비공식으로 접촉했다고 전함.
- 방송은 이번 접촉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정함.

■ **美 하원의장 “미군, 다양한 대북 군사옵션 검토·보유”(연합뉴스)**

-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군은 다양한 옵션을 검토했으며,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함.
- 하원의장으로서 미 외교·정보·국방 당국의 보고를 받는 그는 “나는 제시된 계획과 옵션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 추측하고 싶지는 않다”고 더는 언급하지 않음.
- 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우리 군은 우리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여러 옵션이 존재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말함.

2017. 9. 15.

■ **“美 하원, ‘北 금융망 접근 차단’ 대북제재법 상정 검토”(연합뉴스)**

-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금융기관 등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5일 미 하원 금융위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Impeding North Korea's Access to Finance Act of 2017)을 상정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금융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안 초안은 북한 금융기관이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대량현금(벌크캐시) 거래를 하는 북한인, 북한 해외노동자 등에게 상당한 또는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를 도운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에 대리계좌(correspondent account)나 결제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 **北 신문 “美 계속 지금처럼 나가면 더 강도 높은 대응조치”(연합뉴스)**

- 북한은 북태평양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5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계속 지금처럼 나간다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대응조치는 더욱 강도 높게 취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그 어떤 압박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정세논설에서 미국을 향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대조선(대북)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같이 위협함.

- 신문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연속 패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심리는 복잡하겠지만 미국은 교훈을 찾고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며 “미국이라는 대국의 안전과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뿐”이라고 강변함.

나. 북·중 관계

2017. 9. 12.

■ NHK “中 4대 국유은행, 외교관 포함 북한 국적자 거래 정지”(연합뉴스)

-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 4곳이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자의 계좌에서 지난 달 말까지 예금을 전액 인출하도록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 등에 요구했다고 NHK가 12일 중국 금융사정을 잘 아는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함.
-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4대 국유은행은 외교관을 포함, 모든 북한 국적자 계좌의 예금 인출시한인 지난달 말 이후 이들 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를 정지시켰는데, NHK는 중국 국영은행의 이런 조치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중국이 지금까지 보다 더 엄하게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내외에 심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함.
-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과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총영사관에 지난달 31일까지 외교관을 포함, 모든 북한 국적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라고 통보했고, 이후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가 정지됐으며 신규 계좌 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다. 북·일 관계

2017. 9. 10.

■ 日 이노키 참의원, 북한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연합뉴스)

- 프로레슬러 출신의 일본 정치인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원 의원이 10일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노키 의원은 이날 만경대 소년단야영소와 중앙동물원 등도 참관함.

2017. 9. 13.

■ “日 외무성 간부, 北 외무성 부국장에 핵·미사일 도발 항의”(연합뉴스)

- 나마즈 히로유키(<魚+念>博行) 일본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에게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스위스 외교부와 제네바 안전보장정책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렸으며, 북핵문제와 동북아시아 정세 등이 주로 논의됨.
-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나마즈 참사관은 지난 12일 최 부국장과 잠시 접촉을 했으며, 나마즈 참사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2017. 9. 14.

■ **日 관방 “北미사일 도에 낙하 않도록 요격 포함해 대응할 것”(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요격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교토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돗토리(鳥取)현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일본 영해나 본토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이런 발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요격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됨.

2017. 9. 15.

■ **日 관방 “北 미사일 도발 결코 용인 못 해..가장 강한 말로 규탄”(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북한이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북한의 도발 행동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규탄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하고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가장 강한 말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그리고 한국과 미국,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가 입수되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협의함.

라. 북·러 관계

2017. 9. 13.

■ 북러 밀착행보…주러 北대사 “양국 우호전통 협약화가 목표”(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최우방 중국마저 이에 동참하자, 북한이 러시아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임.
-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수립 69주년 기념일(9일)을 맞아 개최한 연회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 전통을 세심히 다루고 있으며, 이 관계가 효력 있는 협약으로 이어지도록 발전시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함.
- 김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으며, 그는 “DPRK(북한의 공식 명칭)는 핵무기 보유국이 됐으며, 그 어떤 적도 감히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9. 9.

■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등록 北선박 활동 차단 주도(연합뉴스)

- 뉴질랜드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태평양 활동 능력을 차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함.
- 뉴질랜드 TV3 뉴스허브는 8일 북한 선박 태평양 활동 차단 방안이 이날 사모아서 폐막한 태평양 도서국포럼에서 뉴질랜드 주도로 마련됐다고 이같이 밝힘.
- 이 방안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앞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깃발을 달고 활동하는 북한 어선과 상선들을 찾아내면 해당 국가들은 이들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뉴스허브는 설명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제리 브라운리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을 식별해내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그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함.

■ **멕시코서 쫓겨나는 北대사 “추방명령은 무지한 조치” 반발(연합뉴스)**

- 멕시코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김형길 주 멕시코 북한대사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지 멕시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함.
- 김 대사는 이날 멕시코시티 북한대사관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추방 명령을 “무지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엠바르고와 라프렌사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함.
-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으며, 이에 대해 김 대사는 “멕시코 정부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이와 같은 양자 외교 조치를 한 데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반응함.

■ **北 “핵무기 유럽타격 주장은 언어도단…프랑스부터 핵포기하라”(연합뉴스)**

-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북한 핵미사일이 유럽을 위협할 수 있다는 프랑스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함.
- 9일 AFP통신에 따르면 리덕선 북한 외무성 유럽2국 부국장은 전날 평양에서 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는 프랑스가 직면하지 않는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억제력이라고 주장함.
- 리 부국장은 “최근 프랑스 고위 정치인들이 북한의 성공적인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용 수소탄 폭발 시험에 관해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함.

2017. 9. 10.

■ **태평양 섬나라들, 북핵 규탄·북한 선박 등록 취소하기로(연합뉴스)**

- 태평양 섬나라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광에 대한 미사일 발사 위협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태평양 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 기후변화로 더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서둘러 행동에 나서 달라고 요구함.
-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8일 밤 일주일간의 회의를 폐막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발표문(communique)을 내놓았다고 AFP 통신과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함.
- PIF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광을 향한 미사일 발사 위협을 규탄하면서

팜이 PIF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팜 공격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며, 회원국들이 현재 태평양 국가들의 선박등록부에 올라 있는 북한 무역선이나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함.

■ 라오스 대통령, 김정은에 정권수립일 축전(연합뉴스)

-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이 8일 북한 정권수립일(9월 9일)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2017. 9. 11.

■ 안보리 북제재안, 유류 30%에 10억 달러 상당 석유수출 등 차단(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표결에 부칠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기존보다 후퇴했으나, 그 안에 대북 유류 제공량을 기존대비 30%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규제와 섬유 수출 제재를 통해 10억 달러 (1조 1천 320억 원) 상당의 대북 유입 차단 방안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안이 망라돼 있었으나 러시아, 중국과의 물밑협상 결과 이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고 AFP·교도·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함.

■ 이란 외무부 “北 핵실험 우려…이란 연계설은 허위”(연합뉴스)

- 마흐람 거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연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란이 이에 협력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무분별하고 사실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주장함.
-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9일 “북한의 급속한 핵무기 개발이 이란의 비밀스러운 지원 덕분일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영국 외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외무부가 “과거와 현재의 핵보유국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개발 추진을 도왔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함.
- 거세미 대변인은 “이란은 이와 관련해 북한과 협력하지 않았다”면서 “핵무기와 대량파괴무기(WMD) 사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완전히 명확하다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강조함.

■ IAEA “핵핵 감시팀 구성”…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연합뉴스)

-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안전조치국 산하에 구성했다고 밝힘.
-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IAEA 규정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함.
-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달 3일 감행한 6차 핵실험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었다”면서 “국제사회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 중단)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라고 비판했으며,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 모니터링팀과 관련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 정치의 변동으로 북한이 IAEA에 복귀할 때를 대비하려는 조처라고 말함.

2017. 9. 12.

■ 北 인민무력상 박영식·노동당 3개 핵심기관, 제재명단에 추가(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개인 1명과 3개의 단체를 추가로 제재대상 명단에 올림.
-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박영식은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인민무력상으로, 김정은 체제 들어 승승장구한 인물이며, 평양방어사령부 정치위원 출신인 그는 2014년 4월 군부의 인사권을 틀어쥔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 올랐고, 1년 후인 2015년 5월에는 북한군 서열 3위인 인민무력상으로 일약 승진함.
-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추가한 3개의 단체는 모두 노동당 기구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군을 통제하는 의사결정 기구이며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당 중앙위원회의 양대 핵심 부처임.

2017. 9. 13.

■ EU “대북압박 강화…유엔 새 제재안 이행·추가 독자제재 마련”(연합뉴스)

-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2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전날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한편,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나가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함.

- 유럽의회는 이날 이례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듣고 EU 차원의 대응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유럽议회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모게리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당장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경제제재의 효율성을 최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국제사회 파트너들에도 똑같이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영국 스위스, 유엔 안보리 결의 즉각 이행…제재명단 추가”(연합뉴스)

- 영국과 스위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하루 만에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영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금융제재 공지(Financial Sanctions Notice)를 통해 대북제재 명단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날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힘.
-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의 제재명단에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개인 1명과 단체 3곳이 올랐다고 방송은 전함.

■ 北 김정은, 쿠비에 허리케인 피해 위로(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보낸 위로전문을 13일 1면에 실음.
- 김 위원장은 “쿠바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며 “쿠바 당과 정부와 인민이 이번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 수반에게 위로전문을 보낸 것은 집권 이래 3번째임.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9.11		美상원 군사위원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검토해야” (연합뉴스)
		“남한 정부,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 (자유아시아방송)	
	9.13		美국무부 차관보 “문대통령, 대북 유화정책 아니다”(연합뉴스)
	9.15		매티스 “핵무기 위치 안 중요”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연합뉴스)
		강경화, 美·日 외교장관 연쇄통화…北미사일 대응 협의(연합뉴스)	트럼프 美대통령, 북핵 위기속 11월 첫 방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9.9		오만한 中관영 환구시보, 사드비난 막말 사설 삭제했다가 재계재 (연합뉴스)
	9.15		中상무부, 韓 사드 임시배치에 “한중 무역에 악영향” 경고(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9.15		日외무성, 한국 ‘동해’ 명칭 홍보 동영상에 항의…“수용 못해”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9.11	韓전술핵·日핵무장 거론속 中 “美 동북아무장 가속말라” 경계 (연합뉴스)	
		美하원 외교위 “중국 농업·초상은행 독자제재하라” 정부에 요구 (연합뉴스)	
	9.13	美재무 “유엔제재 안 따르면 中 제재…달러시스템서 배제”(연합뉴스)	
		美재무부 “중·러, 北 밀수출 도와”…위성사진 내밀며 압박 (연합뉴스)	
		틸러슨-양제츠 회동서 트럼프 연내 방중 확인·한반도문제 논의(연합뉴스)	
		美 對北제재 안통하자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제재 추진(연합뉴스)	
	9.14	美 중국산 공구함에도 상계관세…무역갈등 전방위 확산 (연합뉴스)	
			“中 달러시스템서 배제” 등 美압박에 환구시보 “매우 미국스럽다” (연합뉴스)
			中, 美의 반도체기업 인수 승인거부에 반발…“공평한 대우해야”(연합뉴스)
			틸러슨 “중, 원유공급 지렛대로 북 설득해야”(자유아시아방송)
	9.15	틸러슨 美국무 “北 미사일 발사 무모…중·러도 행동하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9.9	美日, BI 전략폭격기 동원 동중국해 공동훈련...“北미사일 견제”(연합뉴스)	
	9.11		아베 “대북 억제 위해 美와 방어체계·방위력 증강 구체적 행동”(연합뉴스)
	9.12	北핵 위기 상황서 미·일 연례 육상합동훈련 시작(연합뉴스)	
	9.15	美日 외무·국방장관 연쇄 통화...“미사일도발 北에 압력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9.12	“조셉 윤 美 대북정책특별대표 한반도 문제 논의차 방러”(연합뉴스)	
	9.13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결의 美측 초강경 초안 수정에 성공”(연합뉴스)
9.14	미 국가정보국장 “러 사이버 공격 급증”(미국의소리)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9.13	中,일본행 단체관광 ‘제한’...“난징대학살 70주년 중일관계 관리”(연합뉴스)	
	9.14		日언론 “中, 유엔결의 이전부터 독자적 대북 의류금수 가능성”(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9.13	‘사드 겨냥 무력시위?’ 중·러, 동해서 해상연합훈련 돌입(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9. 11.

■ **美상원 군사위원장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검토해야”(연합뉴스)**

-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기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함.
-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발언함.
- 이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언급을 거론한 것임.

■ **“남한 정부,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자유아시아방송)**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의견일 뿐 정부 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최강의 한미연합방위능력이 있고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면서 “비핵화 원칙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2017. 9. 13.

■ **美국무부 차관보 “문대통령, 대북 유화정책 아니다”(연합뉴스)**

-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유화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한미 양국이 동일한 대북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힘.
- 손턴 대행은 이날 대북 대응을 주제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유화정책(a policy of appeasement)으로 보느냐는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한국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 동맹국처럼 (한미 양국은) 이해가 같다”고 발언함.

- 손턴 대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코널리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미 FTA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북한에 맞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한다”고 발언함.

2017. 9. 15.

■ **매티스 “핵무기 위치 안 중요”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연합뉴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는 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핵무기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함.
-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 전략핵무기 핵심기지인 노스다코타 주 마이노트 공군기지를 방문해 동행한 기자들이 ‘한국인들이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고려하는 바가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함.
- 매티스 장관은 “우리의 적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게 오랜 정책”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할지, 핵무기나 그와 같은 것을 어디에 둘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밝힘.

■ **트럼프 美대통령, 북핵 위기속 11월 첫 방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취임 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며, 순방의 핵심 의제는 북핵·미사일 대응방안임.
-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주(州) 포트마이어스를 찾은 뒤 돌아오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중국을 방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아마도 11월에 단체로 건너갈 것”, “일본과 한국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함.
- 한·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대책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강경화, 美·日 외교장관 연쇄통화··北미사일 대응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15일 잇달아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이날 오전

- 이뤄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잇달아 전화 협의를 하며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강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사흘 만에 이뤄진 이번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일 3국 요청으로 한국시간 16일 새벽 열리는 안보리 긴급회의 등 계기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보임.

나. 한·중 관계

2017. 9. 9.

■ 오만한 中관영 환구시보, 사드비난 막말 사실 삭제했다가 재계재(연합뉴스)

-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막말 사실을 써 공분을 샀던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해당 사실을 삭제했다가 제목만 바꿔 재계재한 것으로 9일 확인됨.
- 애초 7일자 사실 제목은 ‘사드 배치하는 한국, 두 가지 질문에 답하라’였으나, 이날 ‘사드 배치 완료한 한국 절대로 더 안전할 수 없다’로 수정함.
- 그러나 문제의 표현인 “사드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명청해진 것이냐”, “사드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사이에 놓인 개구리밥이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 등은 유지됨.

2017. 9. 15.

■ 中상무부, 韓 사드 임시배치에 “한중 무역에 악영향” 경고(연합뉴스)

- 15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7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와 관련해 한중 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힘.
- 가오 대변인은 “최근 한중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지속하고 있으나 양국 간 협력 및 교류는 여론의 기초 아래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상을 주었고 중국인들의 우호 감정도 해쳤다”고 발언함.

- 그는 또한 “이는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건전한 발전에도 반드시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한국이 중국의 중대한 이익과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며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양호한 분위기를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발언함.

다. 한·일 관계

2017. 9. 15.

■ 日외무성, 한국 ‘동해’ 명칭 홍보 동영상에 항의…“수용 못해”(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우리 외교부가 최근 동해 표기 홍보 동영상을 일본어 등 5개 국어판으로 추가 제작해 공개한 데 대해 항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에 “‘일본해’라는 명칭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동영상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함.
- 우리 외교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어와 영어 버전에 이어 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러시아어·독일어 등 5개 국어 버전의 동해 표기 홍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지난 13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바 있음.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9. 11.

■ 韓전술핵·日핵무장 거론속 中 “美, 동북아무장 가속말리” 경계(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11일 분석 기사에서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동맹국들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함.
- 글로벌타임스는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와 같은 무기들이 늘어나고 이는 지역 정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함.

- 추인(儲殷) 중국 북경외교학원 부교수는 “북핵 위기는 미국의 주둔군 강화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가속할 것”이며 “중국도 이에 맞서 동북아 지역 군사화에 나서면서 군비 경쟁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美하원 외교위 “중국 농업·초상은행 독자제재하라” 정부에 요구(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미 정부의 독자제재를 공식 요구했다고 조시 로긴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로긴에게 “정부가 발표한 그 간의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죄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함.
-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힘.

2017. 9. 13.

■ **美재무 “유엔제재 안 따르면 中 제재…달러시스템서 배제”(연합뉴스)**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밝힘.
- 므누신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함.
- 앞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지만, 중국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거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美재무부 “중·러, 北 밀수출 도와”…위성사진 내밀며 압박(연합뉴스)**

- 마셜 빌리이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을 주제로 연 청문회

- 에 출석하여 직접 준비해 온 위성사진과 지도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비판함.
- 그는 “북한이 선박의 정체를 조작해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국 항구에 정박한 배들이 북한과 관련한 것인지 알아내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이 단둥은행의 사례처럼 앞으로 더 제재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또 북한 은행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도 찬성했던 유엔 결의안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주장함.

■ **틸러슨-양제츠 회동서 트럼프 연내 방중 확인·한반도문제 논의(연합뉴스)**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2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며, 방중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은 미국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힘.
- 틸러슨 장관은 미국도 중국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을 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방중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외교부는 전함.

■ **美, 對北제재 인통하자 中 12개 주요은행 직접제재 추진(연합뉴스)**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미 정부와 의회는 그간의 대북 다자독자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에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 은행, 민생은행, 광둥발전 은행, 하이샤 은행, 상하이푸둥 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함.

2017. 9. 14.

■ **美, 중국산 공구합에도 상계관세...무역갈등 전방위 확산(연합뉴스)**

- 14일 환구망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공구함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려왔으며 공구함 제품에 대해 17.3~32.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함.
- 미국 공구함 제조업체인 워털루 인더스트리사의 제소로 이뤄진 이번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년초까지 최종 관세액을 확정할 방침임.
- 월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외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미국시장에서 이런 편의를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함.

■ “中 달러시스템서 배제” 등 美입박에 환구시보 “매우 미국스럽다”(연합뉴스)

-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미국의 독자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사설을 게재함.
- 이 신문은 구체적으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 장관의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중국을 달러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안보리에서 방금 새 대북 제재가 통과된 상황에서 미국 측이 독자 제재의 방망이를 또 휘두르는 행위는 ‘매우 미국스럽다’”고 비난함.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앞서 미국은 이런 복잡한 메시지를 많이 보낼 것”이라면서 “미국은 자기 방식대로 미중 외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꼼수는 중국 측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함.

■ 中, 美의 반도체기업 인수 승인거부에 반발…“공평한 대우해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사모펀드인 캐년브릿지의 미국 반도체 기업 래티스반도체 인수 건을 승인하지 않고, “이 거래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백악관이 매각 금지 결정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강력히 반발함.
- 가오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이번 인수 승인을 거부한 데 대해 “중국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감한 영역의 투자에 대해 안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지만, 보호주의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함.
- 가오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행위”라며 “유관 국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함.

■ **틸러슨 “중, 원유공급 지렛대로 북 설득해야”(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런던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중국이 스스로 대북 원유 공급을 유력한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핵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함.
- 틸러슨 장관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대국(great country, world power)으로 지칭하면서 원유 공급 중단을 지렛대 삼아 북한이 현재 걷고 있는 핵무기 개발의 길을 재고하고 앞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발언함.
- 그는 중국이 과거 북한에 원유공급 지렛대를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중국이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함.

2017. 9. 15.

■ **틸러슨 美국무 “北 미사일 발사 무모…중 리도 행동하라”(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도 그들 자신만의 직접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함.
-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영토를 넘어 태평양으로 발사한 직후 성명을 내 이같이 촉구함.
- 틸러슨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은 북한의 원유 대부분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 강제노동의 최대 고용주”라며 북한에 사실상 자금을 대주는 중·리의 역할을 비판함.

나. 미·일 관계

2017. 9. 9.

■ **美日, B1 전략폭격기 동원 동중국해 공동훈련…“北미사일 견제”(연합뉴스)**

- 미국 공군의 B1 전략폭격기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9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미일 공동훈련 사실을 공개하고 “앞으로도 공동훈련을 통해 미일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함.

-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번 훈련이 대북 압력강화 차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정권수립일을 맞아 공동훈련을 벌임으로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통신은 분석함.

2017. 9. 11.

■ **아베 “대북 억제 위해 美와 방어체계·방위력 증강 구체적 행동”(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과 함께 방어체계와 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간부회의에 참석해 훈시를 통해 “북한이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함.
- 이는 일본 자위대의 탄도미사일 방어(BMD)와 미군 항공모함·전략폭격기와의 공동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통신은 분석함.

2017. 9. 12.

■ **北핵 위기 상황서 미·일 연례 육상합동훈련 시작(연합뉴스)**

-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이 11일부터 ‘동방의 방패-17’(Orient Shield-17) 연례 합동훈련을 시작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보도함.
- 제임스 파스퀴레트 주일 미 육군 사령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제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미·일 동맹의 힘은 김정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2017. 9. 15.

■ **美日 외무·국방장관 연쇄 통화…“미사일도발 北에 압력강화”(연합뉴스)**

- 북한의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과 일본의 외무·국방장관이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력 강화 등 공조해 대응하기로 확인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미국 뉴욕에서 이달 열리는 유엔총회에 맞춰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도록 한국을 포함한 3국 외무장관 간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함.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도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압력을 계속 가하자는 방침을 확인함.

다. 미·러 관계

2017. 9. 12.

■ “조셉 윤 美 대북정책특별대표 한반도 문제 논의차 방러”(연합뉴스)

-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차관보)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회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11일(현지시간) “윤 대표가 오늘 모스크바에 도착해 내일 오전 모스크바 시내 외무부 영빈관에서 모르굴로프 차관과 회담한다”고 전함.
- 소식통은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언론 접촉은 없다고 설명함.

2017. 9. 13.

■ 러 외무부 “안보리 대북 결의 美측 초강경 초안 수정에 성공”(연합뉴스)

-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힘.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공보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국과 함께 결의 문안을 조율하는 집중적 작업을 통해 당초 북한 경제를 고사(枯死)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재앙적 인도주의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던 미국의 초강경 결의안을 상당 정도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함.
- 외무부는 대신 “갈등 조장 불용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주문 등의 중요한 정치적 요소가 추가됐다”면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전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핵·미사일 활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함.

■ “크렘린, 트럼프 취임 초기 미·러 관계 전면 회복 제안했다”(연합뉴스)

- 러시아 크렘린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었다고 러시아 일간 베도모스티가 13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뉴스매체 버즈피드(BuzzFeed)를 인용해 보도함.

- 버즈피디는 이 같은 계획이 트럼프 취임(지난 1월) 후 3개월째 한 러시아 외교관을 통해 백악관에 전달된 문서에서 드러났다면서 사실상 이 제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전함.
- 러시아 측은 서한에서 “미-러 관계를 즉각 완전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양국이 5월에 아프가니스탄 대(對)테러전, 이란 핵합의,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과 관련한 특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음.

2017. 9. 14.

■ **미 국가정보국장 “러 사이버 공격 급증”(미국의소리)**

-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수위를 계속해 늘리고 있다고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가 밝힘.
-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13일 “러시아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사이버 공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발언함.
- 코츠 국장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의 목적이나 작전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라. 중·일 관계

2017. 9. 13.

■ **中,일본행 단체관광 ‘제한’...“난징대학살 70주년 중일관계 관리”(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국경절 연휴 시즌을 앞두고 일본행 단체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상하이 현지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13일 “중국 여행사들에 최근 일본행 단체관광객이 전년 수준을 넘지 말도록 하라는 지침과 함께 일본 출국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함.
- ‘일본 단체관광이 전년 수준을 넘지 말라’는 한 지방의 모객 지침은 오는 12월 13일 난징(南京)대학살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관광 자제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017. 9. 14.

■ **日언론 “中, 유엔결의 이전부터 독자적 대북 의류금수 가능성”(연합뉴스)**

-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서 금수조치가 결정된 북한의 의류품 무역과 관련, 중국이 지난달 하순부터 이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에 의류품 가공을 위탁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가 “2주 전부터 중국 세관이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통관 절차를 멈췄다”며 “다른 업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의류품의 북중 무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중국이 전면적인 대북 석유 금수에는 반대했지만, 자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류품 금수조치를 했다면 북한에 대한 조바심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함.

마. 중·러 관계

2017. 9. 13.

■ **‘사드 겨냥 무력시위?’ 중·러, 동해서 해상연합훈련 돌입(연합뉴스)**

-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날 오후 동해와 오후츠크해에서 진행되는 중러 ‘해상연합-2017’ 2단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모 해군기지에서 출항함.
- 양국 해군은 잠수함 구조, 대공·대잠 방어, 연합 구조 등의 훈련을 할 예정임.
- 중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연합훈련으로 중러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9.11	자이드 인권대표 “북, 조직적·광범위한 인권 유린 계속”(자유아시아방송)
	9.12	유엔 “북한 작황조사 무산…식량사정 4년째 파악 못해”(미국의소리)
	9.14	日관방 “韓 대북지원 검토, 국제사회 압력 훼손하는 행동”(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9.9	북 주민, 핵실험으로 오히려 생활고 가중(자유아시아방송)
	9.14	북, 인도주의 지원물자 특권층에 공급(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9.12	인권위, 유엔에 北역류자 조사 청원…국가기구로는 ‘이례적’(연합뉴스)
	9.14	민변 ‘北식당 종업원’ 집건소송 2심도 각하…“실익 없다”(연합뉴스)
	9.15	통일부, MB정부 때 폐지된 ‘인도협력국’ 8년만에 부활(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פור로	9.9	대선후보 출정식에 탈북민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벌금형(연합뉴스)
	9.10	인권단체 “중국, 北핵도발에 탈북자 단속 더 강화해”(연합뉴스)
	9.13	남북하나재단-인천적십자병원, 탈북민 의료지원 협약(연합뉴스)
대북지원	9.9	FAO “13·14일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양식업 지원 방안 논의”(미국의소리)
	9.13	캐나다 NGO 지원 메주콩 100t, 북한 도착(미국의소리)
	9.14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연합뉴스) 국제적십자사연맹, 내달 초 덴마크서 대북지원 협의 연례회의(연합뉴스)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9. 11.

■ 자이드 인권대표 “북, 조직적·광범위한 인권 유린 계속”(자유아시아방송)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3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년 전 자신의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함.
- 자이드 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이날 개막연설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함.
-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주민들이 기본적인 자유에 제약을 받거나 심지어 자유를 완전히 말살 당하고 있으며 지난 3년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그는 밝힘.
-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탄압은 전쟁이나 분쟁 지역이 아닌 현대 사회의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임.
- 자이드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개막 연설과 관련 북한 등 40개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10여 쪽에 걸친 서면 연설문에서 조목조목 밝힘.
- 자이드 인권최고대표는 특히 인권이사회 의장과 회원국이 세계 각국의 인권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17. 9. 12.

■ 유엔 “북한 작황조사 무산…식량사정 4년째 파악 못해”(미국의소리)

- 유엔의 북한 내 작황 조사가 올해도 무산됨. 4년째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게 됨.
- 북한이 올해도 유엔에 작황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힘.
- 산드라 페라리 식량농업기구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1일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올해 작황조사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밝힘.
-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

조사를 위해 북한에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음.

- 작황 조사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추수 직전이나 추수 시기에 실시됨. 올해의 경우 9월 중순부터 옥수수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말까지는 실사단이 북한에 도착해야 하지만 11일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다는 게 페라리 대변인의 설명임.
-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5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 두 차례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과 식량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옴.

2017. 9. 14.

■ **日관방 “韓 대북지원 검토, 국제사회 압력 훼손하는 행동”(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며 이같이 밝힘.
- 스가 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해 각별히 엄격한 제재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9. 9.

■ **“북 주민, 핵실험으로 오히려 생활고 가중”(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수소탄실험 완전성공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핵강국 진입을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핵개발로 인해 주민생활은 더 어려워졌다고 불멘 소리를 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 북한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요란하게 자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높아지고 있음. 핵과 미사일 개발로 주민생활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언급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6일 “중앙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 수소폭탄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선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수소폭탄시험 성공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대단할지 몰라도 인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3대 세습으로 이어진 (김정은)원수님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주민들에겐 아주 불쾌한 일”이라고 주장함.

2017. 9. 14.

■ 북, 인도주의 지원물자 특권층에 공급(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정부가 대북제재의 와중에서 북한에 8백만 달러의 인도지원(영유아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북한주민들은 국제사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은 전함.
- 11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우리나라(북한)엔 혜택계급과 무혜택계급 밖에 없음. 극소수의 혜택계급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무혜택계급은 국가로부터 전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린이영양과자도 일부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가는 대신 인민군의 비상식량으로 둔갑하고 국경경비대에 건빵 대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14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중앙에서 국제사회의 임신부, 영유아 지원물자를 배급계층에게 빼돌리기 위해 온갖 기만적인 술책을 다 쓰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원물자를 왜 밀가루와 분유로 고집하는지 국제사회는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9. 12.

■ 인권위, 유엔에 北억류자 조사 청원...국가기구로는 ‘이례적’(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청원하기로 함.
-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힘.

-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처한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달 중 제출하기로 함.
- 유엔특별보고관·실무그룹에 대한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기관보다는 시민단체·비정부기구(NGO)·개인이 주로 해옴.
- 인권위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이는 국가인권기구들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 발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굳이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임.
- 인권위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됨.

2017. 9. 14.

■ 민변 ‘北식당 종업원’ 접견소송 2심도 각하…“실의 없다”(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해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시 사실상 패소함.
-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민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청구를 각하함.
- 각하란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임.
- 재판부는 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각하함.

2017. 9. 15.

■ 통일부, MB정부 때 폐지된 ‘인도협력국’ 8년만에 부활(연합뉴스)

- 통일부 내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인도협력국’ 명칭이 8년 만에 부활함.
- 통일부는 15일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신설됨. 공동체기반조성국의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그대로 이어받음.
- 그러나 공동체기반조성국에서는 북한인권과가 선임부서였지만, 인도협력국에서는 이전의 인도지원과가 인도협력기획과로 명칭을 바꿔 선임부서 역할을 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9. 9.

■ 대선후보 출정식에 탈북민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벌금형(연합뉴스)

- 2만~3만 원의 사례금을 주며 탈북민들을 대선 후보의 ‘출정식’에 동원한 탈북자단체 대표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박모(42·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함.
- 재판부는 “두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돕기 위해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고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며 “이런 행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뿐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함.

2017. 9. 10.

■ 인권단체 “중국, 北핵도발에 탈북자 단속 더 강화해”(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동아시아 안보 불안을 우려한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을 경유해 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85명에 달함. 지난해 전체 535명의 탈북자가 태국에 도착한 것과 비교해 더욱 늘어난 숫자임.
- 하지만 이러한 탈북 시도는 중국 정부가 최근 수년 새 가장 엄격한 탈북자 단속을 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전함.
- 중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인 ‘HHK’ 팀 피터스 대표는 “북한 정권의 탈북 방지 노력에 중국의 국경 단속 강화가 더해져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오는 여성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북·중 국경 지역의 경계 태세가 최근 한층 강화됐다”며 “중국은 북핵 위기가 고조돼 북한 정권이 전복될 경우, 대규모 탈북민이 중국으로 넘어올 것을 우려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함.

2017. 9. 13.

■ **남북하나재단-인천적십자병원, 탈북민 의료지원 협약(연합뉴스)**

-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인천적십자병원과 탈북민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힘.
- 이에 따라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인천적십자병원에서 만성·중증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 부담 경감 등의 편의가 제공됨.
- 이번 업무협약은 탈북민의 건강과 자립을 위해 남북하나재단이 전국 의료기관과 추진하는 ‘공공의료체계 지원사업’의 일환임. 의료지원이 필요한 탈북민은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면 신청 기준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5. 대북지원

2017. 9. 9.

■ **FAO “13·14일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양식업 지원 방안 논의”(미국의소리)**

- 유엔이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양식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유엔은 북한 수산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해 한국 정부에 제출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북 지원 사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식량농업기구 수산양식부의 한 선임 수산정책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FAO 중국 대표와 칠레 양식업 전문가 2명이 오는 13일부터 15일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양식업 등 6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 이들은 통일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림청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농업과 임업, 수산업 등 분야의 6개 사업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특히 지난해 9월 북한 양식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북한 수산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임.

2017. 9. 13.

■ **캐나다 NGO 지원 메주콩 100t, 북한 도착(미국의소리)**

- 캐나다 구호단체가 최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메주콩을 지원함. 이 단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에 미량영양소 720만포와 메주콩 200t을 지원함.
-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메주콩 100t이 지난 7월 북한에 도착했으며,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해 이 메주콩으로 만들어진 두유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퍼스트 스텝스는 캐나다에서 메주콩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 메주콩은 평안남도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두유로 가공됨.
-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남포시, 형제산 구역 내 200여개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음.

2017. 9. 14.

■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연합뉴스)**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
-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함.
-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 공여 등임.
-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함.
- 이번 지원이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임.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임.

■ 국제적십자사연맹, 내달 초 덴마크서 대북지원 협의 연례회의(연합뉴스)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다음 달 초 덴마크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해 보건과 식수 등 대북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IFRC의 아시아 지원 담당 관계자는 지난 13일 VOA에 “다음 달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 회의에는 핀란드를 비롯해 대북지원 사업을 벌이는 국가의 적십자사들이 참석하며, 대북지원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당면과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